
기자간담회 자료

2018. 5. 9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	1
II.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계획	3
III. 보험분야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	4
IV.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 추진계획	6
1.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	6
2. 금융그룹 통합감독	7
3.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	8
4. 금융실명법 개정	8
V. 기업구조조정	9

I.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

-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“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”과 “금융혁신”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
 - 법정 최고금리, 연체금리 상한, 카드수수료율을 과감하게 인하하여 국민들의 일상 생활속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
 -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,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,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 발의 등 과점적 구조에 안주하여 ‘그들만의 리그’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국내 금융업권의 진입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는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
 - ‘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장기추세치(8.2%) 이하로 관리하고, STX조선, 금호타이어 등 주요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을 일관된 원칙下에 추진하면서 협력업체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
 -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“확고한 금융안정 기반”을 유지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음
- 특히, 지난해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활동이 있었음. 혁신위가 작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운영되어 금융당국을 포함 금융권 전반에 걸친 과감한 쇄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음
 - 금융위는 혁신위 권고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혁신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고,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시행, 금융위 의사록 공개 등 4개분야 73개 세부과제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음
- 금년 1월부터 「금융쇄신」, 「생산적 금융」, 「포용적 금융」, 「경쟁촉진」의 4대 분야에 걸쳐 추진한 “금융혁신”은 총 32개 과제 중 25개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음

- 우선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한 「금융 쇄신」 분야의 경우,
 - 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, 3월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중
- 혁신성장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「생산적 금융」의 경우,
 -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3월 출범시켰고, 4월에는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
 - 또한, 1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라 2.1조원 수준의 코스닥벤처펀드가 조성되는 등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(scale-up)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
-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「포용적 금융」은
 -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,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총 346만명(33조원)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
 - 사회적금융 활성화, 저축은행 등의 불합리한 고금리대출 취급 억제방안을 추진
- 우리 금융산업의 「경쟁 촉진」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,
 -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과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기반을 마련 하였고, 5월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
 - 특히,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월 11일 '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방안'을 우선 발표할 것임
- 남은 금융혁신 과제(7개)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
- 5월중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인 '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'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

Ⅱ.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상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 변화*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중

* (국정과제 22-2) 업권별 중심을 기능별 중심으로 개편 → 금융소비자조직 확대

-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,

- 소비자·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·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,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·조정할 필요성 제기

- 또한,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, 혁신형 금융상품*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조직을 정비할 필요

* P2P, 가상화폐, 블록체인, AI상담, 간편결제 등 新금융기법·상품의 출현

- ⇒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,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

- 앞으로 금융위는 이러한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

- 사전정보 → 상품판매 및 이용 →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

-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'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'의 경우, 평가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

- 현재 시행되고 있는 '경영실태평가'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,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

Ⅲ. 보험분야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

1. 추진배경

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 이라도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첫 번째로 보험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

□ 보험업권은 최근 불완전 판매비율이 점차 개선*되고 있으나, 아직까지 소비자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음**

* 15년말 0.40% → 16년말 0.29% → 17년말 0.22%(금감원 집계자료)

** 전체 금융민원中 보험권 비중 62.5%(금감원 '17년 민원통계)

○ 보험은 미래 불확실성을 장기간 보장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금 규모가 확정되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, 소비자 불만요인이 다양

- 특히,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판매당시에는 관행으로 여겨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시안이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

※ 과거에는 연고영업 중심으로 계약자들도 약관, 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였으나, 최근에는 온라인 보험판매 등의 확대로 약관, 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고 개인간 정보 공유도 활발

○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, 보험업권은 소비자로부터 '신뢰'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

□ 보험회사가 전 영업단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보험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리

○ 소비자 눈높이에서 그 간의 보험업 영업 관행을 재점검하지 않는다면, 앞으로 '불신 누적 ▶ 민원·분쟁 증가 ▶ 보험 판매 감소'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음

□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분쟁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뿐 아니라 신뢰회복을 통한 기업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상생(相生)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

2.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방향

- ◆ 보험의 쏠단계(①광고, ②모집·계약체결, ③보험료납입, ④보험금청구·지급)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문제를 개선
- ◆ 일반 국민들과 보험서비스의 '접점'을 중점 점검·개선하여 피부에 와 닿는 보험산업 신뢰회복 방안을 추진할 계획
- ☞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쉽게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개편

3. 구체적인 정책대안 (예시)

① (광고단계)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광고 개선

- 소비자가 보험광고만 보고도 상품의 유·불리한 내용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실효성 있게 개선
- * 기존 홈쇼핑 등 TV광고 등은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한다는 비판

② (모집단계) 설계사, 보험대리점 등 모집채널 개편

- 설계사의 잦은 이직 또는 퇴직으로 보험계약의 사후 관리가 부실해지고, 모집단계에서 법령 위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 및 수수료 체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음

③ (계약단계) 보험계약청약서, 상품설명서, 약관의 이해가능성 확보

- 청약서, 상품설명서, 약관 등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전부 쉬운 용어로 교체하고, 필요한 경우 도표·예시·삽화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

④ (납입·지급단계)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최소화 방안 마련

- 보험금 지급거절, 축소지급 및 지급지연 등 보험 관련 분쟁과 민원을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겠음
- 약관내용(지급 및 지급거절 사유)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보험상품은 판매중지까지도 검토해 소비자의 신뢰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

IV.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 추진계획

1.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

- 지난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해 당해 금융회사가 단계적·자발적 개선조치를 강조한 것은
 -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IFRS17 도입 및 그에 따른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
 - 국제기준의 전면적인 도입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나,
 - 당해 보험회사들이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자산운용구조 및 재무건전성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음
-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이 시장 전반에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,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사안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·대비토록 유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
 - 금융회사가 금융시장,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,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
 -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·반영할 것이며, 국회 법률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
 -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과 관련 해서도 실제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,
 - 그 상황을 잘 아는 당해 금융회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

- 한편, 일각에서 동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- 이 사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,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·안정성 차원에서 검토·개선할 것임

2. 금융그룹 통합감독

-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
-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금융그룹 리스크(예: 그룹계열 사간 부실의 전이 등)를 금융그룹·감독당국 모두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
- '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(Joint Forum)의 그룹감독원칙 공개 이후 그룹리스크 감독은 이미 금융감독의 필수분야로 정착*
- *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(EU, 美, 日)이 이미 제도를 운용중이고, 금융발전 속도가 더딘 동남아 개도국들(인니 등)도 도입 추세
- 통합감독은 금융그룹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, 즉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임
-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, 감독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,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

3.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

- ☐ 금융산업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주주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핵심 개혁과제임
- ☐ 현재 입법예고('18.3.15~4.30)시 제시된 업계의견을 검토중
 -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제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나,
 -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할 계획
- ☐ 연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*

* (향후 계획) 규개위 심사(5월) → 국회제출(6월) → 정기국회 상정 및 통과('18년중)

4. 금융실명법 개정

- ☐ 현행법상 금융실명제 시행('93.8.12.)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전제재(과징금 부과)를 할 근거가 없는 바,
 - * 금융실명제 시행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처리중
- 일반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는 불편이 없게 하되, 탈법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
- ☐ 아울러 수사기관·과세당국·금융당국간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여
 - 금전제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
- ☐ 5월 중 개선안 마련하고,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 추진

V. 기업구조조정

1. 최근의 현안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소회

□ 금호타이어, 중견조선사, 한국GM 등 기업구조조정 현안 관련, 금융위원장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음

- ① 무엇보다 해당 기업의 ‘회생가능성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
 - 금호타이어의 경우, 부실화의 주요원인인 중국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근본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, 중국 더블스타의 자본유치를 추진하였음
 - 중견조선사의 경우,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이 가능할지 여부를 컨설팅 결과까지 감안하여 판단하였으며, 同 판단에 따라 양 조선사의 처리방향을 다르게 결정
- ② 회생가능성이라는 재무적 판단을 기초로, 해당 산업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균형있게 고려하였음
 - 한국GM의 경우, 협력업체·고용 등 전후방 연관효과 및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, 자동차산업 전문가 및 협력업체 등의 의견도 직접 청취
- ③ “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”이라는 구조조정의 대원칙을 지키되,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음
 - 그 과정에서 노사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
 - STX조선의 경우 단순한 인력감축이 아닌 무급휴직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라는 새로운 대안이 도출 가능했다고 생각하며, STX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
 - 산은 회장님과 함께 광주에 직접 내려가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를 도출해냈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음

-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, 관계기관 및 수많은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이끌어낸 산은 이동걸 회장님의 공로를 높게 평가
 - 아울러, 노사간 합의와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님과 홍영표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
- 대내외여건을 감안할 때, 향후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가 될 전망
 -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,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
 -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,
 - ‘옥석가리기’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혁신기업의 출현을 유도하는 등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성 증대
- 금융위는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및 관련 산업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,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기업 육성*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
 - * 금융분야 혁신창업 지원 3종 세트 : 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 ②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③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
 - 아울러, 기업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인 기촉법이 금년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바, 기촉법 연장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

2. 한국GM 관련

- 한국GM건은 ①재정·금융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, ②해외투자 유치의 성격도 있어 그간의 기업구조조정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
 - 특히 15.6만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GM 관련 산업생태계가 협상과정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음
 - 이러한 차원에서 산은 회장님도 산은이 bank가 아닌 policy branch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함

-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, GM측의 철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,
 -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되었다고 생각함
- 세부적으로는, ①지원방식이 대출인지 투자인지, ②GM이 대주주 책임을 제대로 분담했는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생각됨
 - GM측이 당초 계획보다 증대된 총 64억불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,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경우,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보임
 - GM측은 기존 차입금 28억불, 구조조정 비용 8억불을 출자전환 하여 총 36억불을 투자(equity)로 참여하여 대주주 책임을 분담
 - * 산은은 시설투자로 7.5억불 투자 예정
 - 특히 만료 비토권 회복(자산매각 제한), GM 보유지분 처분 제한 등을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금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임
- 마지막으로, GM이 철수하지 않고 남은 것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높은 완성차 품질경쟁력과 협력업체들의 R&D 역량 및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
 - 따라서, 해외자본의 철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성숙한 노사협력 문화에 있을 것임
 - 또한, 정부로서도 우리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향상과 외투자역 제도 정비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